

여야 '쌍특검 재의결·현안 질의' 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민주, 8~9일 재의결·질의 제안...국힘 "9일 본회의·2월 질의" 제주항공 참사 대책 마련 위한 국회 특위 구성 이번 주 완료 전망

6일 여야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대표 결 의사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약 30분간 만나 1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온 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과 두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사태가 지속되고 경제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의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며 "8, 9일에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응 대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일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는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으로 대신하자는 입장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처리해야 할 법안 등 안건이 거의 없고 먼저 재의결 요구된 6개 법안과 2개 특검법안만 남았기 때문에 목요일(9일) 하루 본회의를 해도 충분하다"며 "계엄 이후에 긴급현안질의를 했다. 짝수 달에 대정부 질문을 하게 돼 있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2월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법안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정당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투표했다. 이를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는 또 이번 주 중으로 제주항공 참사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역대 국회 특위 구성을 보니까 비교대상까지 포함하면 18명으로 구성됐다. (정당별 배분) 10대 7대 1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안을 내줬으면 좋겠다"며 "이번 주 안에는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신속한 피해 구제나 생계 대책 등의 부분에는 서로 합의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양쪽이 이야기해보고 쉽게 (구성에)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최 대행 법질서 파괴 방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과방위 통과

야권 주도 개정안 의결...방통위원 30일 내 임명·회의 생중계 명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권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할 것을 문제로 삼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에 부쳤고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정안은 문자 재판매사사업자가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정부가 전송자격 인증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통위가 사업자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율적으로 운영돼 왔다.

방통위는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제도 안착에 노력해왔고, 이번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과방위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사행성 정보 등의 삭제 여부를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내란죄 제외' 맹공...탄핵 심판 지연전

현재서 비상계엄 위헌 여부만 판단...국힘, 항의 방문

국민의힘은 6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탄핵안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에 정부·여당에 일방적인 내란 프레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하며 "이처럼 존재 자체가 형사소송법 교과서 수준인 이 대표

는 재판 지연을 위해 인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법부의 시곗바늘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죄 철회는)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은 원안대로 제출해 현재에서 판단하도록 막는 것이 백번 옳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내란죄 여부를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다루고 현재 탄핵 심판에선 비상계엄의

위헌 여부만 판단하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부터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권 원내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안의 각하를 촉구하기 위해 현재를 항의 방문했다. 오후에는 중진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들이 우 의장을 만나 탄핵안에서 내란 부분을 제외 또는 변경한다면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내란 사태 가짜 뉴스 신고 '민주 파출소' 가동

민주, 온라인 플랫폼 시연...운영 전부터 1만3000건 제보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사태 '가짜 뉴스' 신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가동한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홈페이지를 시연하면서 "온라인에 퍼진 허위 정보를 효율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라며 "현재 임시 오픈 상태인데

도 벌써 제보가 1만3000건이 넘게 들어왔다. 7일부터는 일반 게시물이 아닌 허위 사실이 담긴 뉴스 댓글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는 '경찰이 시위대에게 맞아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뉴스가 돌고, 국민

의힘은 이와 관련한 가짜 논평까지 낸 일이 있었다. 저 대신 이를 (민주 파출소에) 신고해달라"며 "단순히 고발로 끝내면 안 된다. 금융치료, 즉 손해배상소송도 했으면 좋겠다. 벌금만으로는 너무 약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에 폭행당한 경찰관이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왔지만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라카 최고화질

-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광가,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3. 높은 광고효과**
-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5. LED전광판의 특징**
-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판결공시

• 제1심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954 (2022고단3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 피고인 : 서희승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년 12월 30일
광주지방법원
판사 이광현

73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광광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차 266-7801
	• 용흥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흥 222-9054
	• 중정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북신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림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온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청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	